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95
----------	------

발의연월일 : 2024. 12. 2.

발 의 자 : 정동영 · 이훈기 · 서영교

김 현 · 김 윤 · 김우영

민형배 · 박홍근 · 윤준병

박홍배 · 차규근 · 김준형

한민수 · 용혜인 · 이용우

김태선 · 이해민 · 전종덕

윤종오 · 신장식 · 조 국

조인철 · 진선미 · 이정현

민병덕 · 정진욱 · 김현정

북기왕 · 김영배 · 백승아

임호선 · 권향엽 · 박정현

송옥주 · 이수진 · 허 영

장경태 · 김남근 · 문금주

이재관 · 이재정 · 박민규

박해철 · 허성무 · 박희승

박용갑 · 박지원 · 최민희

임미애 · 이용선 · 강준현

고민정 · 양부남 · 황정아

오세희 · 황명선 · 정혜경

김주영 · 노종면 · 위성락

추미애 · 김영환 · 박상혁

김윤덕 의원(64인)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편집배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배업무”란 우체통·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의 수집,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밖에 우편물의 수집·배달과 관련된 부대 업무를 말한다.
2. “우편관서”란 우체국, 별정우체국 등 우편집배관을 사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관서를 말한다.
3. “우편집배관”이란 우편관서에 소속되어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우편집배관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우편집배관의 배우자

나. 우편집배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복지시설”이란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우편관서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나. 보육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우편집배관 및 우편집배관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
설

마. 그 밖에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위한 시설

6. “체육시설”이란 우편집배관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우편집배관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편집배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집배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우
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편관서의 장의 의무) ① 우편관서의 장은 소속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소요인력측정 기준,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 우편집배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집배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및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집배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우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편집배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제9조(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 ①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 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물량의 일시적인 급증,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집배업무의 일부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제2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유예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집배업무환경측정)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질병요인으로부터 우편집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평가(이하 “집배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집배업무환경측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집배업무환경측정 및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우편집

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우편집배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우편집배관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역학조사)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관서의 장과 우편집배관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

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복지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시설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우편집배관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과 우편집배관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우편집배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